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 재판

'부당지시·압력' vs '오류 바로잡기 위한 적극행정' 광주시 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A씨 상대 증인 신문 감사지적사항 해석 놓고 논박...내달 18일 다음 재판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중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시청 공원녹지과 소속

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검사는 A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변경 과정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압력·묵인이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정확한 책임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 건설사만 홀로 이익을 제기한 배경, 평가 보고전 유출 경위 등을 질의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접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A씨는 최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사업 제안서 내용(국토교통부 방침과 배치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건축·용적률 등)이 평가 기준에 어긋났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일부 옳다고 본다. 다만, 지적사항이 (추후) 평가 업무에 개입·관여했다고 생각한다. 심의서 서식을 그려 주는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앞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부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 감사위원회의 '업무 부적정 계량평가 감사 결과' 가운데 제안 심사위원회(전문가 심의)에 상정해야 할 안건과 시정 공원녹지과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판단해야 하는 주체를 놓고 추후 논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시 도시공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찰청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선욱기자

'집합 금지 무시' 영업 강행 유흥업주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2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액 2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려던 수금액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광주 동구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의 계좌로 송금 중이던 수금액 A(20)씨가 은행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검거 직전 A씨는 은행 자동화현금출기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은행원은 ATM기 앞 서성이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1650여만 원은 다행히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손수레 앞지르려다 잇단 사고 낸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페지 수거 손수레를 앞지르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잇단 교통 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62)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페지 수거 손수레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의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고 손수레를 끌던 B(60·여)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와 손수레 사이를 가로질러 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 아파트서 불...주민 10명 대피

15일 오전 11시43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20층 규모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입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아파트 내부 80㎡ 중 10㎡와 일부 가전제품이 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이 집중적으로 그을린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재갑 "갯벌 인명사고 매년 수십건...방지책 미흡"

"어촌체험마을 안전기준 마련·안내판 설치해야"

갯벌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위험 안내 표시가 없고 해양수산부의 어플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갯벌에서 매년 수십 건의 안

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국내 어촌체험마을 112곳 중 63%(71곳)는 갯벌 위험이 있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어촌체험마을 지정과정에서 안전기준이 모호해 위험 안내 표시가 없어도 체험마을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갯벌 사고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승호기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플로 갯벌포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휴대폰 기종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갯벌에서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윤재갑 의원은 "어촌체험마을의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갯벌 입구와 해변 곳곳에 갯벌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끊이지 않는 갯벌 안전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구급출동·환자이송 감소

구급출동 1190건·환자이송 2184명 줄어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남지역 소방서의 구급 출동과 환자 이송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안 총 17만4836건의 신고를 접수해 5만4394건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화재 1754건, 구조 1만 5243건, 구급 3만7397건으로 일일 평균 화재 19건, 구조 165건, 구급 406건이다. 3분기 구급 출동은 총 3만 7397건으로 2만962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대외활동 자제로 지난해 대비 구급 출동은 1190건, 환자 이송은 218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화재 출동 1754건 중 실제 화재는 445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로 사망 4명, 부상 51명 등 55명의 인명피해와 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